

“중대재해법, 2년유예 촉구”...국회 향한 4000명의 외침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열여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촉구 “선부른 시행, 참혹한 결과 초래할 것”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자리에 모인 4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은 ‘민생외면 각성하라’ ‘사고나면 형사처벌’ 등의 피켓을 머리 위로 들며 연신 유예 촉구를 외쳤다.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에게 투표로 심판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전 국제청장 등도 현장에 찾아 뜻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중처법

이 결국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후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선옥 삼부전력 대표는 “여기 계신 모두가 과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근로자의 삶을 살아왔고, 인고의 시절을 지나 작은 사업장의 대표로 살고 있다”며 “가족과 같은 직원들을 위험에 내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근로자는 일하고 사업주는 지시만 한다는 시대착오적 갈라치기로 우리의 외침을 더 이상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남궁훈 엔스브 대표는 “어떤 대표가 직원들이 죽고 다치는 걸 원하겠나. 그리고 어떤 직원이 대표가 구속되길 원하겠나”며 “중처법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위축으로 모든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

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중처법을 유예해 예방시스템을 갖춘 시간을 부여해야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현장에 참여했다. 김도경 탐엔지니어링 안전보건팀장은 “중처법은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관리에 힘을 것이라는 원론적 생각으로 만든 탁상행정의 폐해”라며 “처벌이 강화될 수록 실질적 안전관리는 소홀해지고, 담당자들은 형식적 서류만 만든다.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무지한 법 강행은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사업주로 규정해두었을 뿐, 근로자 옆에서 함께 흠뻑 땀을 마시며 일하고 있다”며 “선부른 중처법 시행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



황이 안타깝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예기간동안 안전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

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집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거리 화단 장식할 비올라 포근한 초봄 날씨를 보인 14일 인천시 서구 계양공원사업소 초화양묘장에서 관계자가 거리 화단에 심을 비올라 꽃에 물을 주고 있다.

경찰이 집 찾아와 음주 측정 요구, 불응한 50대 2심선 무죄 왜?

“영장 없고 절차 어긋 위법하다”

집 앞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선 무죄를 인정받았다.

자택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법 집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오후 7시께 광주 도심 일대 도로에서 운전하다 주차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에 25분간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 이어 “A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했다.

1심에선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출동 경찰관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자 이야기를 듣고 자택에 찾아가 외출복 그대로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한 점,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와 얼굴 혈색이 붉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주거(지)에 대한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안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측정 요구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한다거나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A씨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의 수사로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하고,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찰관들은 A씨의 집에 들어가면서 A씨와 A씨 아들에게 적법한 고지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아들에게 집에 들어가도록 승낙받으면서 사고 발생 외에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범죄 예방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즉시강제로서 적법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김희면기자

박수홍 큰형 ‘횡령 혐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미디어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法 “박수홍과 부모 가족관계 파탄 초래”



못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미디어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슬비기자

‘10년 전 이혼’ 숨기고 가족수당 받은 공무원

감사위, 인사위에 중징계 요청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남편과 이혼 후에도 10년 동안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직원을 적발해 중징계 요구했다.

1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씨가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 했음에도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매월 가족수당 4만원, 총 480만원과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말 승진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교육을 마친 뒤 이달 말에 승진 임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감사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승진 의결 이후 제보가 접수돼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